

국가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산물유통의 **공익적가치 반영**을 위한 제안



농협경제지주 푸드플랜국 안재경

세계 식량가격지수, 2년 반 만에 최고치

곡물 5.1% · 설탕 5.2% 유제품 3.6% 급등 ... 육류는 보합·유지류 1.1% 떨어져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곡물과 유제품, 설탕은 올랐고 유지류는 내렸다. 7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2.3% 상승한 179.1 포인트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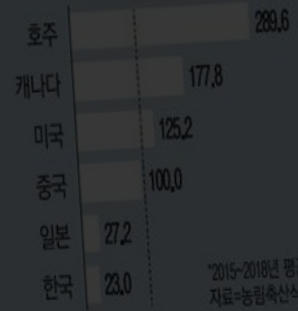
올해 3월 171.6에서 4월 168.9로 떨어졌다가 5월 171.6으로 상승했다. 이는 공

서울경제 개도국 농산물 소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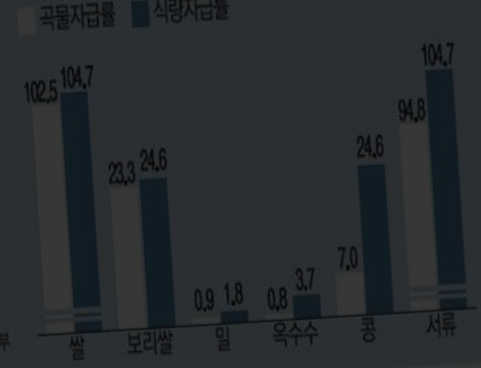
우리나라 먹거리 여건은 어떻습니까?

밀은 99.1% 해외서 들여와

주요국 최하위 수준인 韓 곡물 자급률 (단위:%)



주요 곡물 품목별 자급률 (단위:%)



*2016년 양곡 연도 기준.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2018년 평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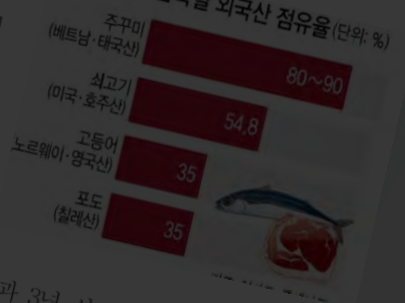
수출이 한우 수출 오렌지·포도 등 과일류도 비중 높아져

축산물, 수산물, 청과 등 외국산 먹을 거리가 우리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품에 따라서는 80% 이상 수입품이 점령해 산을 거의 찾기가 어렵다. 국산 제품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가격이 오르면 적으로 저렴하고 공급이 원활한 외국산이 리를 메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에 따르면 이마트에서 지난해에서 수입품(미국·호주산) 비중은 우(45.2%)를 앞질렀다. 한우 비중이 59% 수준이었지만, 불과 3년 사이에 뒤집혔다.

시장의 절반을 중국산 등에 내준 상태다.

주요 품목별 외국산 점유율 (단위: %)



2017년 기준
 식량자급률 47.8%
 곡물자급률 23.0%



자료 : 농식품부

세계 식량가격지수, 2년 반 만에 최고치

곡물 5.1% · 설탕 5.2% 유제품 3.6% 급등 ... 육류는 보합·유지류 1.1% 떨어져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2년 6개월 만에 곡물과 유제품, 설탕은 올랐고 유지류는 내렸 7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2.3% 상승한 179.1 포인트로 조사됐다. 올해 3월 171.6에서 4월 168.9로 떨어졌다. 175.2에 이은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는 공

서울경제

개도국 농산물 소비 급증 · 국제 분업화로 식량 안보 위협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IT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도국(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신기술-신산업 못지 않게 농업을 포함한 농업 부분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01월 10일 수요일 A37면 종합

매일경제

2019년 07월 28일 일요일 A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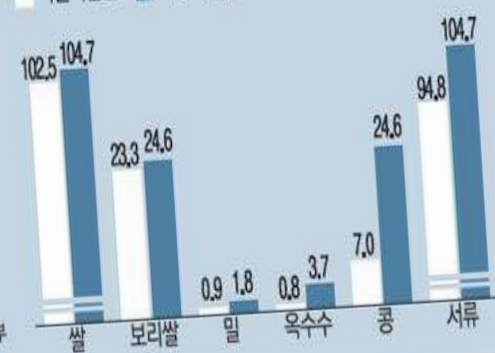
위기의 식량안보 ... 곡물소비 77%가 수입산

韓, 최근 3년간 자급률 23%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밀은 99.1% 해외서 들여와

주요국 최하위 수준인 韓 곡물 자급률 (단위:%)



주요 곡물 품목별 자급률 (단위:%)



*2016년 양곡 연도 기준.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2018년 평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세계일보

외국산 농수축산물 우리 식탁 '점령'

1년 쇠고기 매출, 수입산이 한우 추월
 트 쭈꾸미, 80~90%가 베트남·태국산
 케지·포도 등 과일류도 비중 높아져

수산물, 청과 등 외국산 먹을 거리가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따라서는 80% 이상 수입품이 점령해 1의 찾기가 어렵다. 국산 제품 요에 미치지 못하고, 가격이 오르면 저렴하고 공급이 원활한 외국산이 매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르면 이마트에서 지난해 수입품(미국·호주산) 비중은 2%를 앞질렀다.

·비중이 59% 수준이었지만, 불과 3년 사이에 뒤집혔다. 의 절반을 중국산 등에 내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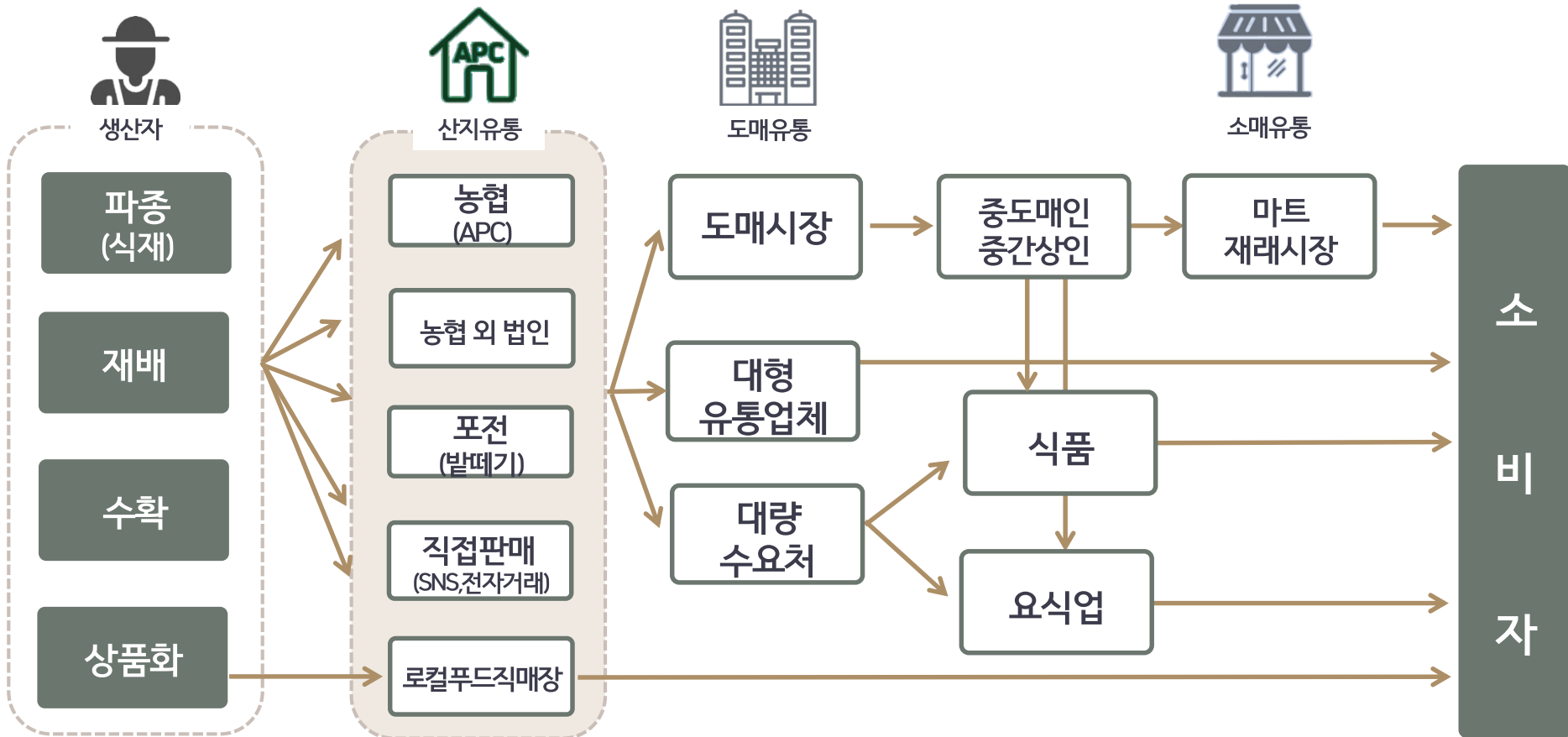
2017년 02월 06일 월요일 018면 경제

주요 품목별 외국산 점유율(단위:%)



우리 농산물은 어떻게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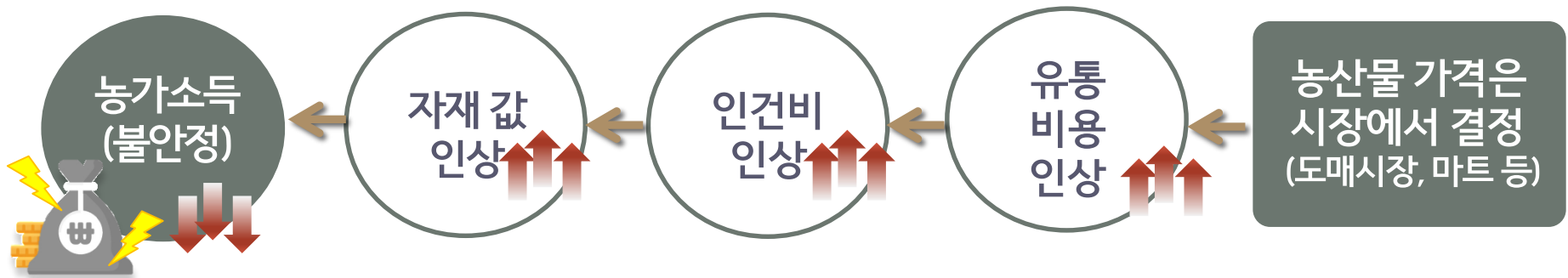
농산물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주체의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소비자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은 대부분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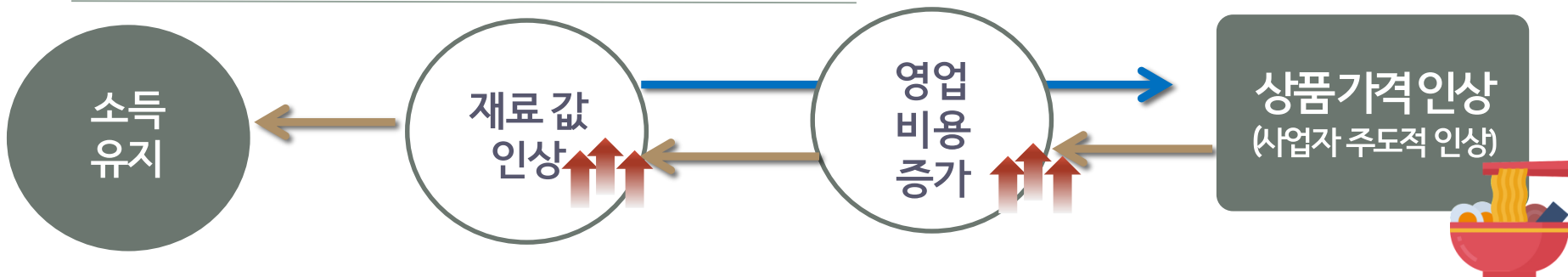
농산물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어
생산과 유통과정의 비용이 증가해도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농산물의 가격결정구조와 농가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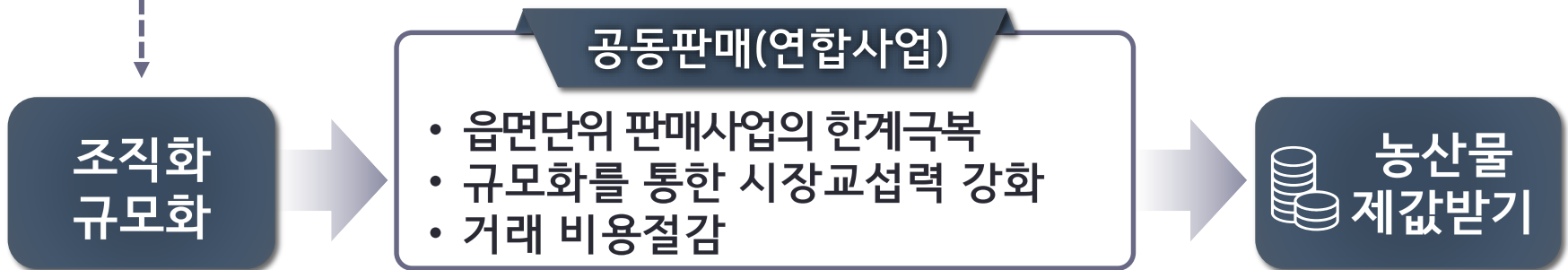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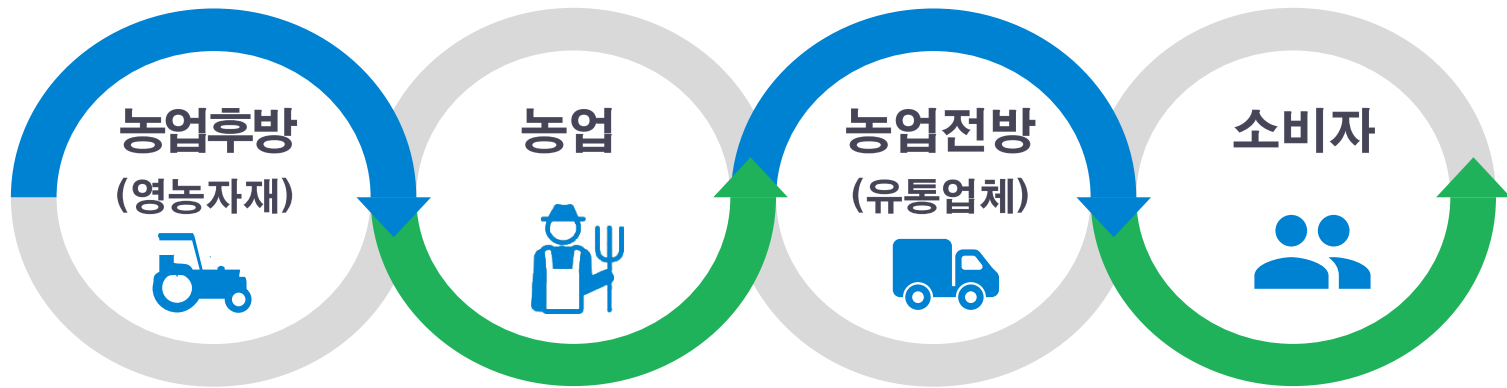
어느 분식집의 소득

비용이 증가하면 상품가격을 인상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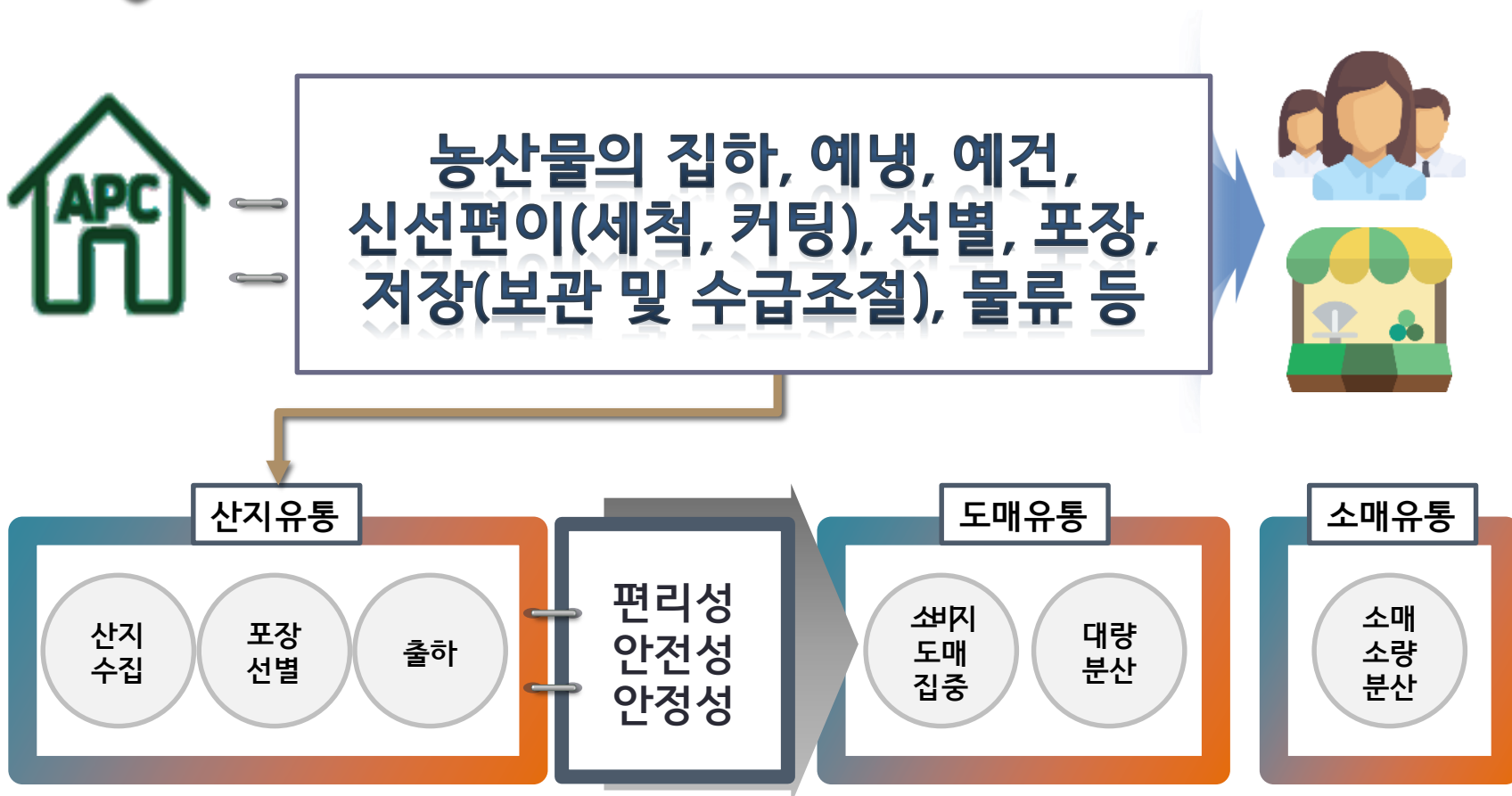
농가개별판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합사업으로 농산물제값받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전·후방 대비 다수의 개별주체로서 농업인은
거래교섭력이 약해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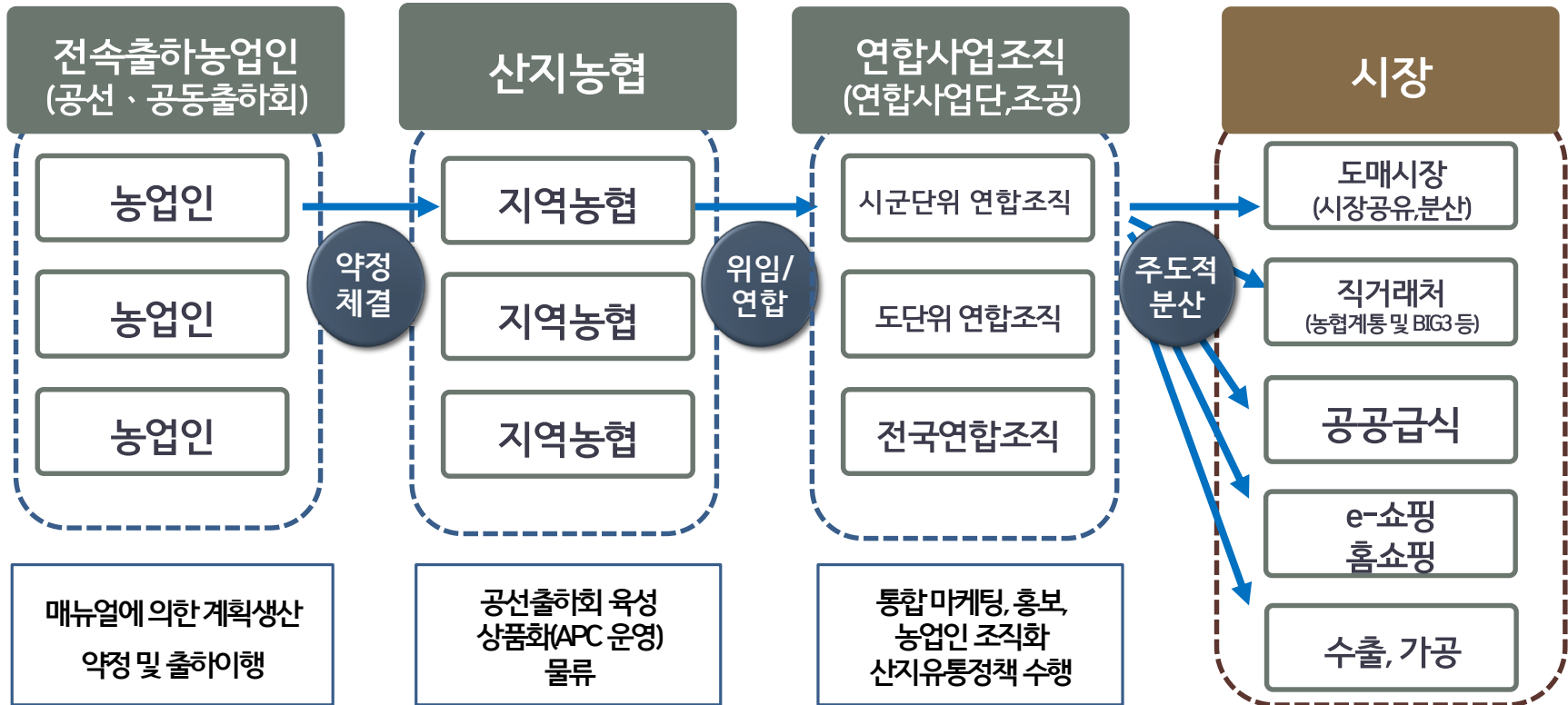
APC는 산지유통전략의 핵심이며 농산물의 선별, 포장, 저장 등을 수행합니다.

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한 상품화(품질관리, 소포장)로
소비자 편익과 도·소매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지원합니다.



산지유통은 APC의 역할과 규모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강화합니다.

농업인 조직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품목별 공동마케팅을 통해 생산비 이상의 농산물가격을 수취하고자 노력합니다.



산지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은 생산자의 적정소득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지원합니다.

농업인 조직화로 시장대응력 강화

비교적 소량 다품목 생산체계인 우리 농업 구조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인을 조직화하여 시장대응력을 강화합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농업인을 대신하여 농산물을 수집하고, 예냉, 선별, 전처리(세척, 커팅), 포장, 물류 등을 수행하여 영농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도·소매업계의 구매효율성 지원

소비자의 구매편리성을 고려한 상품화와 농산물유통체계 최적화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여, 도매·소매업계의 구매효율성을 지원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

계약재배, 저장, 비축 등 수급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합니다.



정부 정책대상 APC의 운영현황과 지원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농산물유통혁신을 위해 APC 건립과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APC운영 현황(2018말)

농협(개소)	농협외 법인(개소)	합계	원예농산물 유통액	APC 취급액	APC취급률(경유율)
403	163	566개소	15조	5.4조	36%

- 건립지원 (최근 3개년평균) : 431억원/연간(국비·지방비)
- 평균지원율(%) : 국비32.5, 지방비32.5, 자부담 35

● APC운영 운영비(2019배정 예산 기준)

구분	총 배정액(백만원)		농협조직		농협외 법인	
	조직수(개소)	배정액	조직수	배정액	조직수	배정액
공동선별비 지원	709	(국비) 8,921	615	(국비) 7,465	54	(국비)1,456
		(지방비)8,921		(지방비)7,465		(지방비)1,465
물류기기공동 이용지원	949	8,004	417	2,139	532	5,865

정부 정책대상 APC의 운영현황과 지원내용은 이렇습니다.

**APC의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핵심 비용의 지원은 집행예산액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선별비】 예산부족으로 지원기준액 465억대비 287억 지원부족

2019 집행 예상액	2019 배정액	지원율	부족액	<지원기준>
92,992(백만원)	17,842 (자차지원포함)	19.2%	28,654 (50%대비)	(시군조직)수탁 : 국비25%, 지방비25, 자부담50 매취 : 국비10%, 지방비10, 자부담80 (광역조직)수탁 : 국비50%, 자부담50 매취 : 국비20%, 자부담80

* 2019집행예산액 : APC 사업자별 공동선별계획 합계액

【물류기기공동이용】 예산부족으로 지원기준액 225억대비 145억 지원부족

2019 집행 예상액	2019 배정액	지원율	부족액	<지원기준>
44,909(백만원)	8,004	17.8%	14,451 (50%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 물류기기 이용액의 60%, 자부담(VAT포함) ▪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 - 물류기기 이용액의 40%, 자부담(VAT포함)

* 2019집행예산액 : APC 사업자별 물류기기공동이용계획 합계액

농산물 유통단계의 대부분의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농산물의 생산자 수취가격은
소비자 지불액의 55.6% (전체평균가중치)입니다.

● APC연간 취급액 5조4천억원을 환산해 보면! (APC취급액=도매판매액)

농가수취가격	유통비용(44.4%)				소비자 지불가격
3조 8,841억 (55.6%)	출하단계 (8.8%)	도매단계 (12.9%)	소매단계 (22.7%)	합계	6조 9,857억원 (100%)
	6,147억	9,012억	1조 5,858억	3조 1,017억	

소비자가격 10,000의 예시 농가수취가격 : 5,560원 출하단계(880원/농가부담) 도매(1,290원/농가부담) 소매(2,270원)

유통비용의 구분

- 직접비(15.3%) : 1조 688억 수확포장작업비, 운송비, 포장재비, 상하차비, 수수료, 감모비 등
- 간접비(15.1%) : 1조 549억 점포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 이윤(14.0%) : 9,780억 유통비용에서 직간접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자료 :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조사(aT, 1997년부터 매년 조사)
조사방법/품목별로 주산지 3~5개 지역을 선정, 농산물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따라
소비자까지 출하되는 농산물의 유통비용 및 거래실태를 조사

산지유통단계의 유통비용은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필수 직접비용입니다.

농가부담 필수 유통비용은 6,147억원으로 추정되며
총 유통비용 (3조 1017, 소비자지불액의 44.4%)의 19.8%입니다.

농가부담 유통비용 추정액 (6,147억) 농협 4,531억, 74%

공동선별비 : 930억 농산물의 선별포장작업비(사업자신청액)	농협 744억(80%)
물류기기공동이용 : 449억 팔레트등물류기기이용료(사업자신청액)	농협 119억(27%)
운송비 : 1,603억(3.8%-449억)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배송비*	농협 1,393억(87%)
포장재비 : 1,890억(3.5%) 고객편의와 물류효율을 위한 포장재비*	농협 1,393억(74%)
기타 APC 운영비 : 1,275억* 인건비APC개보수감가상각감모비이운등	농협 882억(70%)

총 4,872억
(농가부담 필수 직접 비용)

정책적 지원액 258억
'19 배정액 기준(공선+물류기기)



지자체 지원액 53억
'19 배정액 기준 (포장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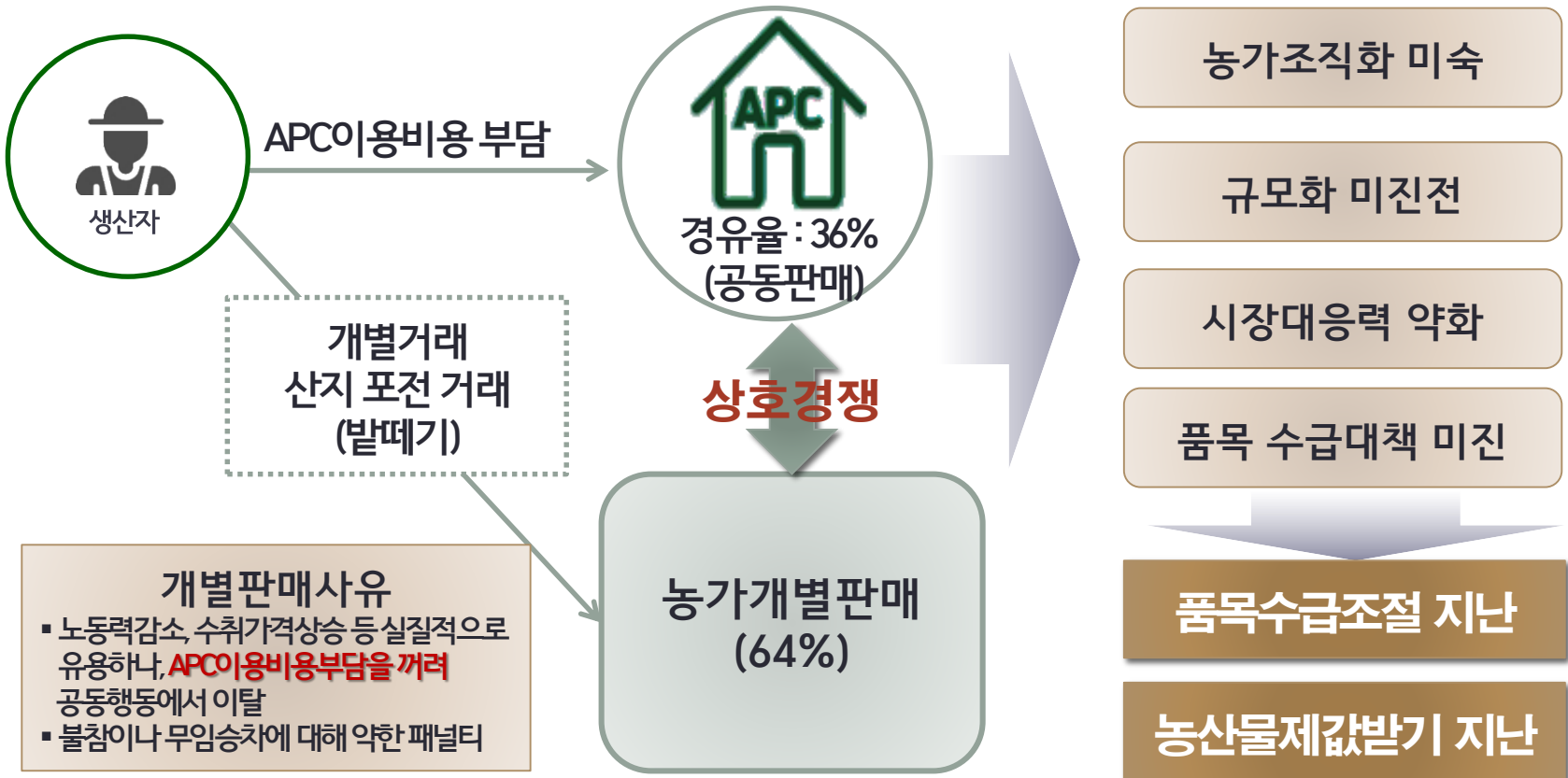
농가 직접 부담액 4,561억원
(4,872억-258-53)

*본 추정액은 정책대상 APC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하였음
 -물류기기공동이용료: 농협은 대형유통기업거래가 핵심사업인 법인군의
 대형유통기업 거래 비중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신청비중도 낮음
 *소요액 산정방식: APC경유액의 직접사업비별 비중(농협통계)

*지자체지원액: 농협통합마케팅조직에 지원된 포장재비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이 실행되어도 산지의 주도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APC의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여 공동행동에서 이탈하는 원인이 됩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필수 직접 비용 사회간접비용化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개정에 따라
APC의 운영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영농기반 절실



생산자

- 영농비용 지속 증가
- 기후변화와 생산불안정
- 수입농산물 급증
- 품목간 생산조절 여건 미성숙으로 가격불안 (재생산가능소득불안)
- 간편화 등 소비트렌드 변화

생산비 이상의
소득보장필요

산지유통필수
직접비용의
사회간접비용化

국민의 먹거리 정의구현



- 1인가구증가간편화추구
→ 가공식품소비 증가
- 건강·안전 추구
- 가구당처분가능소득감소
→ '16/4분기이후 ↓성장
- 적정가격의 안전한 농산물 필요

식량자급률 향상
푸드플랜국민의먹거리정의구현
생산원가절감(식품비)

공익적가치반영
↑
국가먹거리안전망구축

농산물 산지유통 필수 직접 비용 사회간접비용化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산지유통단계의 농가부담 필수 직접비용은
농가소득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원가를 높입니다.

곡물자급률 23.0%
식량자급률 47.8%

소비자를 위한 농업인의 땀이며,
생명산업을 지켜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총 4,872억
(농가부담 필수직접비용)

정책적 지원액 258억
'19 배정액 기준(공선+물류기기)

지자체 지원액 53억
'19 배정액 기준 (포장재비)

농가 직접 부담액 4,561억원
(4,872억-258-53)

농가
부담!
소비자
전가?

농가부담 필수 직접비용의
60%!
2,923억원/연간

사회적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간접비용化 검토
산지유통의 준공영제 도입

-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 통신과 전력을 공급하듯



농산물 산지유통 필수 직접 비용 사회간접비용化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산지유통은 농안법*에 의거 생산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유통대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유통센터(APC)

- 설치·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공익법인
- 설치비용 : 국가 및 지자체 지원
 - 건물의평균자원율(%) : 32.5, 32.5, 35(자부담)
 - 토지 : 설치자(대부분 생산자단체)
- 운영비용 : **생산자**(일부 생산자단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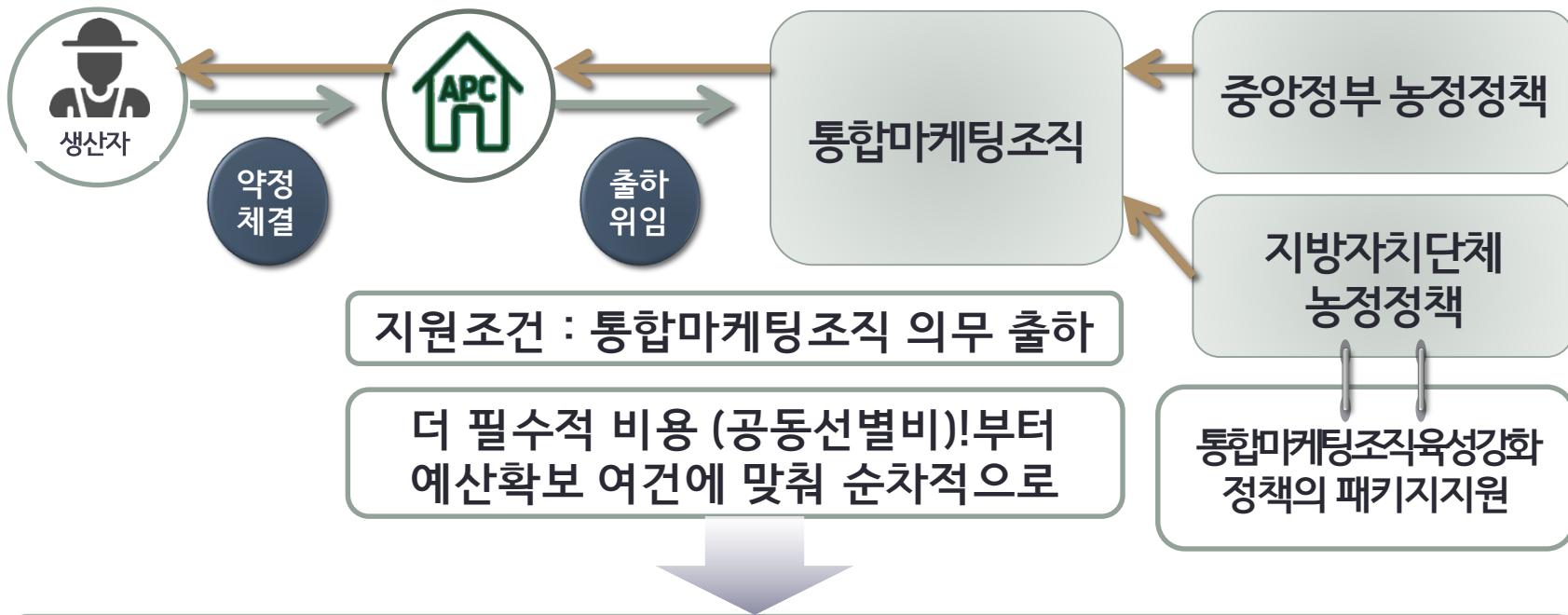
도매유통(도매시장)

- 개설·운영 : 지방자치단체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운영
- 개설비용 : 지방자치단체
 - 개보수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 운영비용 : **생산자(4~7%)**
 - 도매단계수취액 : 9,012억
 - (소비자지불가격의 12.9%)

↑ 시장중심의 농산물가격구조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지 지원책 ↑

산지유통비용의 사회간접비용化! 품목단위 규모화를 목표로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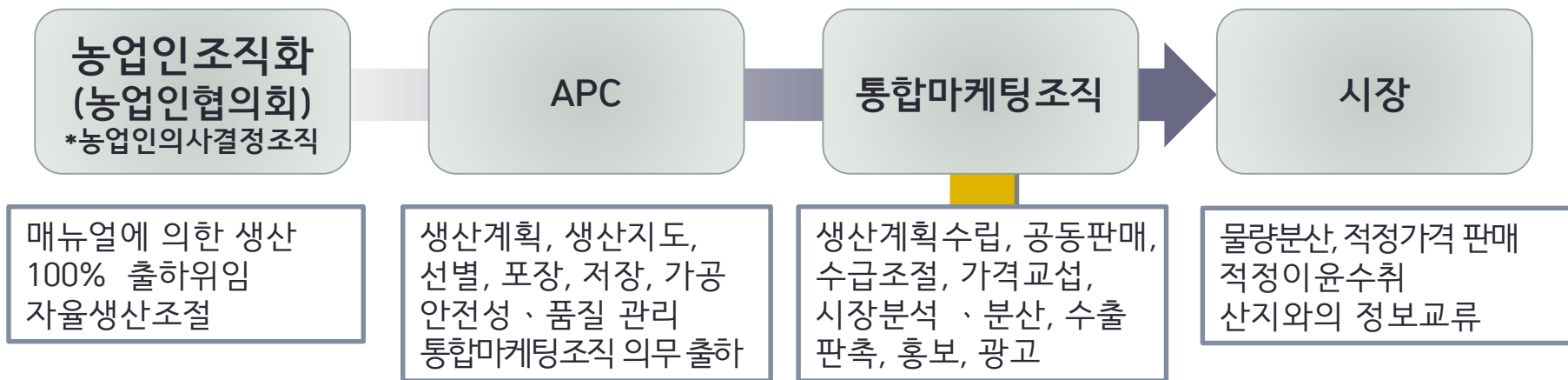
시군단위 이상의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지원으로
품목별 규모화의 기반을 확보하고 가격결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국단위 품목유통전략의 기반 구축(공동판매, 품목별 농가조직화 · 수급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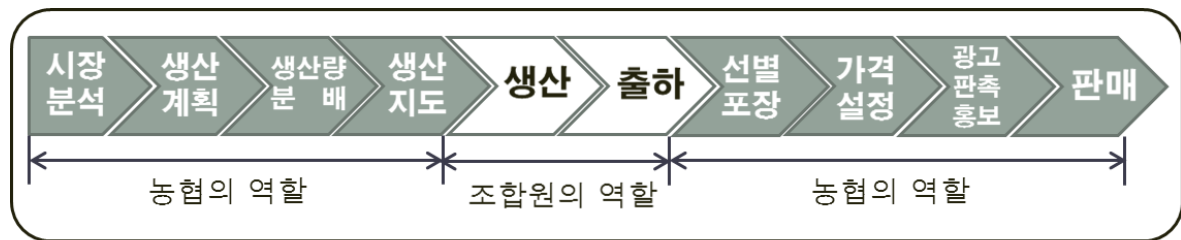
통합마케팅조직이 강해지면 농산물유통체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 품목전문조직(마케팅보드)!
수급조절과 통합마케팅을 통해 농산물 제값 받기를 구현합니다.



이탈리아 APOFRUIT 농협과 조합원의 역할(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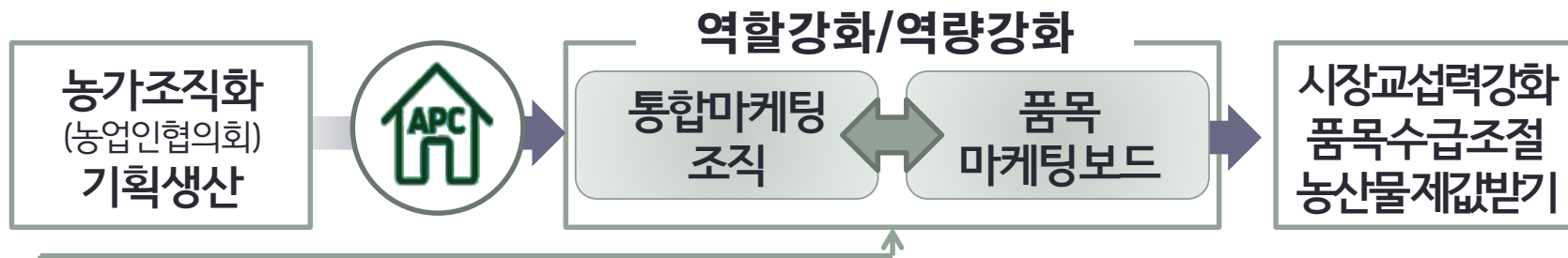
1960년 설립
전국 청과물 협동 조합 기업
APC 12개소, 저장고 14개소
매출액 : 2억 5,500만유로
EU 운영보조 : 매출액의 4.1%



자료 : 이상섭(2012). "남유럽 판매전문농협의 농산물 판매사업의 특징" NHERI 주간 브리프.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전략! 대한민국형 PO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의 생산자조직(Producer Organization)에 대한 지원정책



EU 및 각국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한 조직을 국가가 인증하여 정책 지원

승인 : 아래 사항 중 최소 2개 항목을 포함한 운영계획 작성, 승인요청

생산계획(수급예측 등), 품질향상, 상품가치향상, 홍보·마케팅, 환경보전 및 유기농 촉진, 재난·위기 대응

지원 : 매출액의 4.1%를 상한으로 운영프로그램 계정(혹은 펀드)의 50%를 매칭 지원

재난·위기 대응의 경우 4.6%까지, 생산자조직의 비중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EU가 추가 지원 가능

EU 전체 PO는 완만한 증가세 유지

시장점유율 : 벨기에 92%, 네덜란드 68%, 스페인 63%, 독일 62%, 프랑스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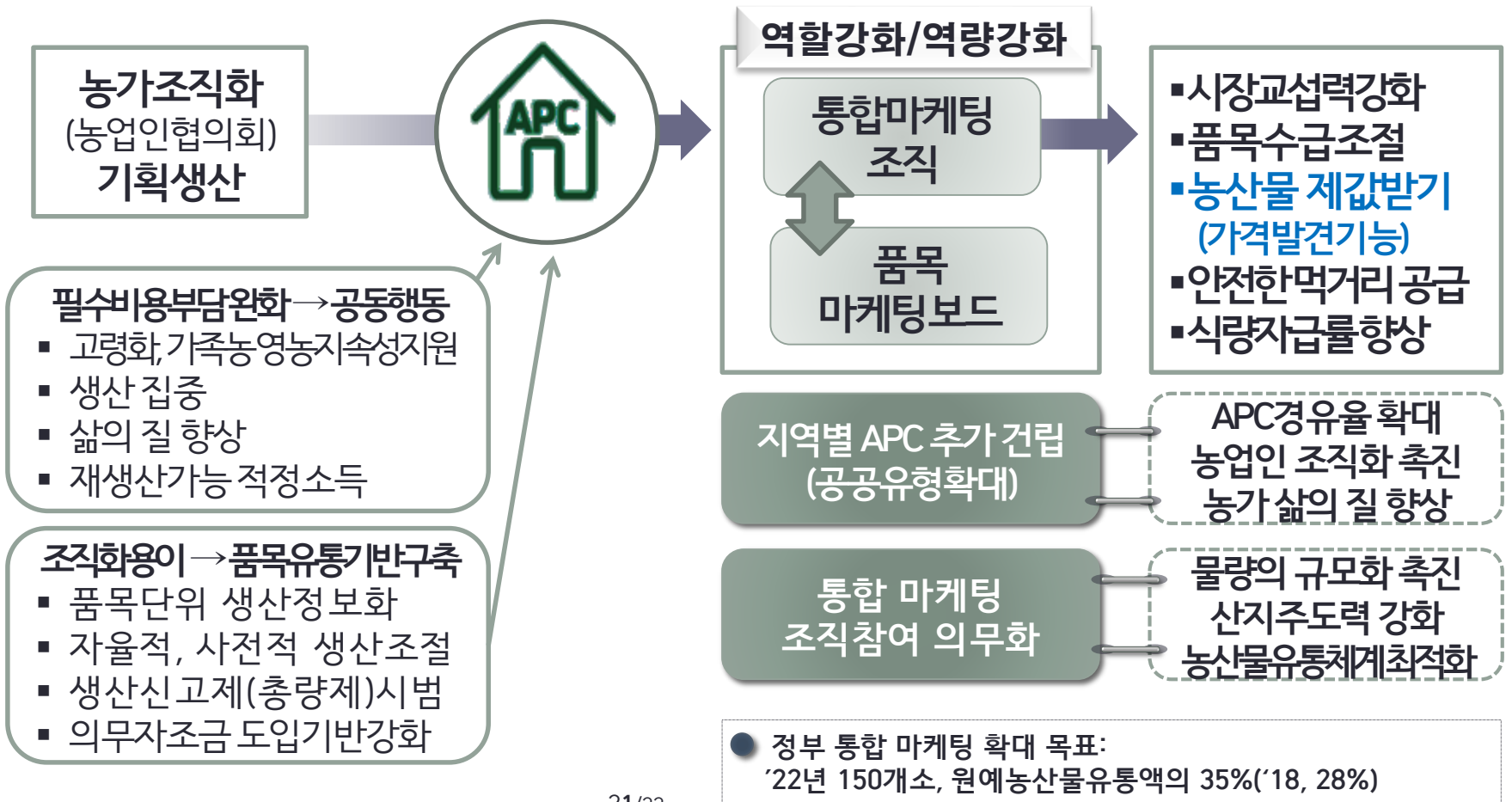
원예분야 중점 목표

1>시장경쟁력강화, 2>농가소득보전, 3> 시장위기대응력 제고, 4>청과물 소비촉진 5> 친환경 재배기술 개선

* CAP : 유럽연합공동농업정책

산지유통비용의 사회간접비용화(준공영제)! 농산물 가격안정과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공동행동을 촉진, 규모화를 통해
농산물가격결정에 관여력을 높여 농가소득안정화에 기여합니다.



농산물유통은

농업인이 생산하신 농산물을
우리 국민의 먹거리로 공급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공익적가치의 정책적 반영을 통해,
그 수행비용을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NH NongHyup 농협경제지주
푸드플랜국장 안재경